

작년보다 직장 내 갑질 ↑ ...신고는 어려워져

신원 노출 우려에 신고 못해 괴롭힘 경험 1년 새 6.3% ↑

“부서 막내인데 배달 음식을 같이 안 먹었다는 이유로 선임이 재수 없다는 내용의 사내 메시지를 보냈다. 이유 없이 머리를 뜯고 가기도 해 답장 면답을 하고, 가해자 분리도 요청했지만 회사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지난해보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가능성은 커졌지만, 이를 신고하기는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올해 조직 진단 점수에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0점 이상 점수가 떨어진 지표 8개 중 7개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관련이었다고 12일 밝혔다.

조직 진단 지수는 휴가, 평가, 위계, 소통 등 ‘조직 만족도 평가와 예방, 대응, 사후 조치 등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평가’로 구분된다. 점수가 낮은 지표일수록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미다.

가장 큰 폭으로 점수가 하락한 지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신원 보호’ 51.7점으로 지난해 64.2점보다 12.5점 떨어졌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이후 복귀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 11.9점(66.5점→54.6점),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더라도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 11.6점(66.3점→54.7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도 줄어들지 않을 것’ 11점(68.1점→57.1점) 등의 점수 하락 폭이 컸다.

직장인 상당수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지난해보다 신고하기 어려운 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임원이나 상사에게 예의나 의견을 갖추라

고 요구한다’는 지난해 69.7점에서 올해 59.3점으로 10.4점 낮아졌다. 이는 이른바 직장 내 갑질이 더 빈번해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6월 실시한 조사에서는 직장인 29.6%가 최근 1년 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지만, 지난 9월 조사에서는 35.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권오훈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일터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존엄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개정해 ‘성폭력 괴롭힘 등 노동인권 위협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예방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9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김희민기자



광주 동부소방서-동구어린이집, 소방관과 함께 ‘불조심 캠페인’ 실시

광주 동부 소방서(서장 송민영)는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동구 어린이집 원생 및 학부모와 함께 관내 대인시장에서 불조심 캠페인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강진소방, 소방의 날 대통령 단체표창 수상

강진소방서(서장 최기경)는 지난 9일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2022~2023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평가’ 전국 1위 소방서로 선정되어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했다. 강진=김영일기자



광양소방, 제61회 소방의 날 ‘안전하기 좋은날’ 캠페인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지난 9일, 제61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라퍼커션과 함께하는 안전하기 좋은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함평경찰, 주민참여 치안활동 전개로 수확철 농산물 절도 예방

함평경찰서(서장 윤창기)는 수확철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해 자율방범대 등 주민 참여를 통한 농산물 절도 예방을 실시하고 있다. 함평=김광춘기자



완도해경, “국민을 위한 동행” 하반기 정책자문위원회 열어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기정)는 지난 9일 영상회의실에서 해양경찰의 주요 정책을 알리고 민·관 소통,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23년 하반기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여수해경, 겨울철 맞춤형 안전관리로 해양 사고 예방에 총력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생활밀착형 해양 안전관리로 해양 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대비와 선제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수=기동취재본부

“성전환증 진단에도 예비군 훈련 받으라는 병무청 처분 위법”

“병역 변경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원고 승소’ 판결

고도의 성별 불일치로 성전환증 진단을 받아 신체 등급 5급에 해당하는데도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지 않은 병무청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병역 변경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육군에 입대했으나 2017년 6월 군 복무 적응 곤란자로 분류,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A씨는 2018년 사회복무를 마쳤고, 2021년 병원에서 성전환증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더 이상 예비군 훈련을 받

지 않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병무청에 요구했다.

병무청은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적 상태”라며 A씨를 신체 등급 3급으로 판정한 뒤 A씨 요구를 불허했다.

A씨는 “병역법 12조 4항의 위임을 받은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등을 보면, 고도의 성별 불일치로 신체 등급 5급에 해당한다. 예비군 편성 규정상 전시 근무역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A씨는 또 “병무청은 자신과 같은 정신과 진단과 호르몬요법을 받은 성전환자 여성들에게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 줬다”며 평등 원칙 위반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21년 성전환증 진단에 따라

6개월 이상 호르몬요법을 받은 뒤 지난해 다시 성전환증 판정을 받았다. A씨가 제출한 병무증 진단서에도 ‘치료가 1년 이상 계속해서 필요하나, 치료 후에도 성전환증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사 의견이 적혀 있다. A씨는 신체 등급 5급(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가 된 다음 해인 2019년에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 2020년~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예비군 소집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예비군 훈련 일부를 부담하게 면제받을 목적은, 2년 이상 지속해서 여성 호르몬 요법을 받는 등 여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A씨에 대한 병무청의 처분은 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오유나기자



자녀 합격 기원 담긴 촛불 행렬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일 앞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 열린 학업원만 성취 기도 촛불기원 법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업 성취를 기원하며 사찰을 걷고 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일 앞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 열린 학업원만 성취 기도 촛불기원 법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업 성취를 기원하며 사찰을 걷고 있다.

올해 전남지역 산불 11% 증가...산림 952ha 피해

전남도가 전년보다 늘어난 산불 발생에 대응해 오는 12월15일까지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영농부산물과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해당 기간에는 산불 발생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도 본격 가동한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 말 현재까지 전남지역에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한 총 51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952ha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원인별론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 17건(33%), 입산자 실화 15건(29%), 불씨 취급 부주의 6건(12%), 담뱃불 실화 4건(8%) 순이었다.

특히 가을철에는 입산자 부주의와 수확철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에 따른 산불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원인별 특성에 맞는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는 예방 활동을 위해 지난 10월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를 체력검정, 신체검사 등 공모 과정을 거쳐 1034명을 선발했다. 진화대는 10명 내외로 조를 편성해 운영하며 진화대별 임무가 부여된다.

우선 산불 발생 빈도가 높은 산림 41만 2000ha와 등산로 712km 구간을 입산 통제 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진화대를 취약지별로 분산 배치해 소각 행위를 단속한다.

산림 인접지 100m 내에서 고춧대 등 영농부산물을 소각하거나, 주택 생활 쓰레기 소각 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지난 봄철 기간 98건을 적발해 23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대형 산불에 대비해 임차 헬기 8대, 드론 38대, 진화 장비 5만4000점을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했다.

전남도는 지난 4월 함평과 순천에서 유례없는 큰 산불이 발생했지만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으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했다.

또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처우개선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산림청 주관 봄철 산불 예방 대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안상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올해 봄철 함평과 순천에서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870ha의 소중한 숲을 한순간에 잃었다”며 “가을철에는 입산자 실화와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에 따른 산불 발생이 높은 만큼 산불 방지를 위한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서선욱기자

렌터카 무면허 음주운전한 10대 가로등 ‘쿵’

광주에서 술에 취해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한 10대 가로등을 들이받아 차량에 탄 4명이 부상을 입었다.

12일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광주 서구 농성동 한 도로에서 A(18)군이 렌터카를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A군과 차량에 함께 탄 A군의 친구 3명 모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7%로 면허정지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뉴스스